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702호 (2020년 4월 첫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문화체육관광부] '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로 경남, 대전-세종, 인천 선정	2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관광자원개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안전부] 'DMZ 평화의 길' 140억 투자 본격 추진	5
[환경부]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착수	7
[해양수산부]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8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화충신권 낙산성곽길 정비...11월말 완료	10
[부산광역시] 부산시, 민간 전시화국제회의에 4.7억 추가 지원	12
[대구광역시] 대구 엑스코 및 경북대 일대'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13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청, 용유·무의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본격화	14
[광주광역시] 광주시, 브랜드 관광도시로 거듭 난다	16
[대전광역시] 대전 관광 환경 분석할 통계자료 나왔다	17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확충...240억 투입	19
[전라북도] 국가산림문화자산 새단장으로 산림가치를 높이다	20
[전라남도] 전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21

[문화체육관광부] '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로 경남, 대전-세종, 인천 선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창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협업, 대전 중구), 인천광역시(송도)를 선정*했다.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심사 등 총 3단계 심사

□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지방비 5:5 균형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반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허브) 구축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지사와 협력해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해 부산에 개소('19년 9월)한 첫 번째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반년간 45개 입주 기업을 발굴하고, 이 중 12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입주기업 대상 경영자문(컨설팅)·교육,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기반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구축될 3개소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는 학생 감소로 인해 생긴 지역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 경남관광재단은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에 경남관광산업의 구름판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경남의 강점을 살릴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두 지자체가 협력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내륙광역권 관광산업의 요람을 조성한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의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인근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21년부터는 세종지역 관광기업 교류와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 대전 센터는 세종 비즈니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국제도시 송도와 항만·항공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관광일자리 창출 거점을 조성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 등 관광 관련 기구가 밀집되

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비에스(IFS)타워 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의 바탕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에서 관광기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장소로,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7) | 게시일 : 2020.03.23.)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관광자원개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월 26일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대상 확대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26일(목)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Tourism Development Support System, www.tdss.kr)'의 이용 대상을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보와 최신 연구보고서, 법령 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이 민간 개발자, 관광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점차 다양해져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 대상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 업무지원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으로 분리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에서는 ▲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현황, ▲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중앙 정부의 관광개발정책 관련 정보, ▲ 관광개발사업 관련 법령, 판례, 사례, ▲ 수요자 맞춤형 관광통계, ▲ 각종 뉴스와 공모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 메뉴 구성>

사업정보	정책정보	지식정보	통계정보	뉴스·소식
사업소개	관광개발기본계획	법령정보	관광자원통계	보도자료
사업조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전문가칼럼	지역관광발전지수	언론보도
	타 부처 관광개발 관련 계획	관광개발사례	누리소통망 분석	공고·공모
	타 부처 관광개발 사업 편람	보고서	관광 통계	
		영상자료	타 분야 통계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통계를 제공하는 누리집은 있었지만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은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 처음”이라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4-203-2892) | 게시일 : 2020.03.26.)

[행정안전부] 'DMZ 평화의 길' 140억 투자 본격 추진

- 도보여행길 526km,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7개 테마노선 추가 개방

□ 정부는 DMZ 인근에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올해 140억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DMZ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 구간에 세계적인 명품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문체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DMZ 평화의 길' 명칭을 선정하고, 3개(고성, 철원, 파주) 테마구간을 시범 운영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걷기 동호인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최종 후보 노선을 선정했다.

□ 올해는 140억원(국비 90억, 지방비 50억)을 투자하여 노선 정비, 지역별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7개 테마노선 추가 개방, 통합브랜드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도보길 노선정비는 마을안길, 자전거길, 임도 등 기존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위험하거나 노면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하고 군사 보안을 위한 시설·장비(CCTV) 등을 설치한다.

○ 거점센터 리모델링은 도보 여행자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폐교, 마을회관, 군부대 미활용시설 등을 새단장 해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한다.

- 거점센터는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별로 1개씩 총 10개소가 조성되며, '19년에 5개소*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고, 올해 추가로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19년(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 '20년(강화, 연천, 철원, 인제, 고성)

○ 또한, 지난해 DMZ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7개의 테마노선*을 추가로 개방해 총 10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잠정중단 중인 테마노선은 돼지열병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개방할 계획이다.

* 강화, 김포, 고양, 연천, 화천, 양구, 인제

○ 아울러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도보여행길로 조성하기 위한 홍보전략도 마련한다. DMZ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통합브랜드(B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통합브랜드는 지자체별 특징을 반영하여 거점센터, 안내표지판 등에 적용하고, 기념품·특산물 등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DMZ 평화의 길을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고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15) | 게시일 : 2020.03.25.)

[환경부]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착수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올해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3월 27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
-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
- 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
-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타당성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최적의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1) | 게시일 : 2020.03.27.)

[해양수산부]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 : 「수중레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발령, 4.26. 시행)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과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증가추이) (2015년) 76만 명 → (2016년) 108만 명 → (2017년) 115만 명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둘째,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 셋째,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68호)

□ 아울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 이번에 제정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3월 27일 고시 발령 후 4월 26일부터 시행

되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7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제정·개정된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7) | 게시일 : 2020.03.27.)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화충신권 낙산성곽길 정비...11월말 완료

- 낙산공원~이화충신 마을~한양도성박물관 1km 정비, 마을주민과 한양도성 탐방객 안전편의 증진
 - 한양도성 성곽 흔적포장으로 연결, 마을쉼터 등 주민편의시설 정비, CCTV·가로등 확충
 - 시, “한양도성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편의 증대, 끊어진 한양도성 역사경관 회복 노력”
-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도성과 인접한 성곽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인 종로구 이화·충신권의 낙산성곽길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 공사는 낙산공원 정상에서 이화마을, 충신마을을 거쳐 한양도성박물관까지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약 1km 구간에서 시행되며, 한양도성과 주변 성곽마을의 도로, 골목길, 녹지대 등이 정비된다.
- 낙산성곽길은 한양도성과 이화·충신권 성곽마을이 공존하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정비공사를 통해 한양도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걷기 좋은 성곽길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보행로는 야자매트, 경화마사토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성곽길이 조성된다.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도 전면 재포장된다.
- 한양도성의 역사경관 회복을 위해 성곽주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는 낡고 훼손된 석축, 시설물, 수목은 한양도성과 잘 어울리도록 일제히 재정비하고, 낙산공원 정상 한양도성 단절구간은 흔적 포장하여 그 연계성을 확보한다.
- 한양도성 단절구간에 위치한 마을버스 종로3번 정류장과 회차지점은 20m 아래로 이전되고, 낙산성곽 하부의 석축은 기존 한양도성과 잘 어울리는 화강암 장대석으로 정비된다.
- 또한, 한양도성과 더불어 살기 좋은 성곽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이화·충신마을 주민의 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이 요청한 마을쉼터를 마을내 자투리 공간에 새롭게 조성한다. 마을 기반시설인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를 적용하여 CCTV와 가로등도 확충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한다.
- 성곽에서 철거된 마을쉼터와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은 빈집 철거부지나 자투리땅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는 새롭게 재정비된다.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사로 예상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 착공하여 11월말 완료할 계획이다.

-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낙산공원으로 잘 알려진 이 화동과 충신동의 낙산성곽길 정비를 통해 한양도성 경관개선과 주민 생활편의가 증대 될 것”이라며,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60) | 게시일 : 2020.03.26.)

[부산광역시] 부산시, 민간 전시회·국제회의에 4.7억 추가 지원

- 코로나19 극복 및 부산 마이스업계 전시산업 성장 지원
- 민간 전시회 및 국제회의에 긴급추경 4억7천2백만 원 투입, 3.25.~4.10. 신청 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행사 취소·연기에 따른 마이스(MICE)업계 경영난 해소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행사 취소·연기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지역 마이스(MICE)업계를 돕기 위해 「2020 민간주관전시회·국제회의 개최」 추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실질적·신속적인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전시·컨벤션 업체 등 민간이 자체 개발하고 국·시비 지원이 없는 전시회와 국제회의에 개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열감지기·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행사개최가 가능하도록 긴급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 투입하는 것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오프라인 간담회 등으로 마이스업계의 피해 상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안정적 행사 진행을 위한 경비지원 ▲개최지원금 상향조정 ▲하반기 행사집중이 예상되므로 벅스코 외 개최 장소의 추가발굴 및 임대료 지원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이번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시 마이스산업과로 우편(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6층) 또는 메일(sorairo69@korea.kr)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관광공사, (주)벅스코,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MICE워크넷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주관전시회·국제회의 추가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마이스(MICE) 전시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며, “향후 ‘안전한 행사기획’ 등 새로운 콘텐츠 전시회 발굴에도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051-888-5176) | 게시일 : 2020.03.24.)

[대구광역시] 대구 엑스코 및 경북대 일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 대구시 엑스코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됐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대구시 엑스코 · 경북대학교 권역 102만㎡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승인했다.
- 앞서 대구시는 ‘대구비즈니스(MICE)¹⁾타운’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에 참여했으며, 마이스 산업육성 거점인 엑스코와 인력양성 거점으로 경북대학교를 설정하고 두 축을 중심으로 대구 마이스 산업 발전과 지역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잘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이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 엑스코, 컨벤션부로 등 지역 마이스 업계가 함께 참여해 집적시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 특히 대구컨벤션부로는 대구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서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진과 참여자 간 의견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그동안 대구시는 지방 최초로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최초로 컨벤션부로를 설립했으며,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을 추진하는 등 마이스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 또한 2013 세계에너지총회를 비롯해 2015 세계물포럼, 2019 세계뇌과학총회, 2021 세계가스총회 등 대형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유치하는 등 국제회의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왔다.
- 이번 지정으로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마이스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5+1산업²⁾과 연계해 비즈니스 마이스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 이기석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은 대구시가 지금까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이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제2의 대구 마이스산업 도약을 이루겠다” 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053-803-3274) | 게시일 : 2020.03.23.)

1)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네 분야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일반관광산업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 미래 도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2) 5+1산업 : 대구의 신성장산업으로 물, 의료, 에너지, 미래자동차, 로봇 + 스마트시티 산업을 뜻한다.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청, 용유·무의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본격화

- 용유 오션뷰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마무리
 - 용유·무의 발전전략 수립 12월 완료...공공하수처리시설·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추진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지역을 경쟁력을 갖춘 관광·레저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 인천경제청은 용유 오션뷰, 무의 LK, 무의 솔레어 복합리조트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수립을 마무리하는 등 용유·무의 지역 내 해양문화·관광·레저사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 먼저, 인천경제청은 (주)오션뷰가 중구 을왕동 산 70-1일대에 콘도 등을 짓는 ‘용유 오션뷰’ 개발과 관련,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제시됐던 대로 개발 가용면적을 축소해 오는 4월 중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무의동 산 349-1일대에 컨벤션·콘도 등을 건립하는 ‘무의LK’개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원형 보존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면적을 축소해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솔레어코리아(주)가 실미도 해수욕장에 세계 최상위 수준의 레저·휴양 지향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의 솔레어 복합리조트’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후, 오는 8월 실시계획 승인신청,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한 용유·무의지역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국토연구원과 함께 착수했으며, 올 12월 완료를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카지노 복합 리조트 등 주변 시설 등과 연계 개발하는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용역을 통해 △용유·무의 지역의 관광·레저 기본구상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방안 △융·복합 해양문화 스마트시티 조성,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방안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편, 인천경제청에서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본격 나선다. 용유지역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총 3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공

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청은 지난 해 무의대교 개통으로 여름 휴가철 하나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총사업비 11.3억 원(시비 5.65억 원 구비5.65억 원)을 확보해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원에 나섰다.

- 이밖에 무의도 내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도로 확장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하나개~광명항 △하나개~하나개해수욕장 등 2개 도로와 용유지역인 △공항서로~남북로간 도로에 각각 338여억 원과 440여억 원을 투입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정상철 인천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장은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하수관로·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용유·무의지역을 해양문화·관광레저 중심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3) | 게시일 : 2020.03.26.)

[광주광역시] 광주시, 브랜드 관광도시로 거듭 난다

-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진흥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대표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 5대 핵심과제 전략·대안 마련

- 광주광역시가 2020년 예술관광을 통해 브랜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진흥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4년 간 수행하는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보고회는 용역사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줌스컴퍼니 콘소시엄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유관부서장의 질의·응답, 제안 등 순으로 진행됐다.
-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진흥 기본계획'에는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예술관광 브랜드화 및 대표 콘텐츠 개발 ▲사업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과 운영 방안 ▲예술관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민간단체 육성 ▲광주시 주력산업과 연계한 추가 국비사업 발굴 등 5개 핵심과제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 특히 용역을 통해 광주시는 9월까지 '삶으로 느끼는 예술관광',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예술관광', '관광산업활성화를 견인하는 예술관광', '아시아의 창조인력을 끌어 들이는 예술관광' 등을 목표로 광주·전남 예술관광 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 조사, 유사사례 분석 등을 실시한다.
- 더불어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관별, 직능별 거버넌스 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도출한다.
-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올해 추진하는 예술관광사업이 문화만을 위한 문화, 예술만을 위한 예술의 틀을 깨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구 및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광주가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20) | 게시일 : 2020.03.24.)

[대전광역시] 대전 관광 환경 분석할 통계자료 나왔다

- 2019년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결과 발표

다양한 진단과 분석으로 대전방문의해 관광정책 이정표 역할 기대

□ 대전 관광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광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가 나왔다.

○ 그동안 대전 관광에 대한 신뢰 있는 통계가 없어 관광관련 행정·홍보·연구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 관광현황과 발전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2019~2021)를 맞아 실시한 ‘2019년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 연구결과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성심당, 으능정이거리, 한밭수목원 등의 순이며, 선호하는 음식은 성심당 빵,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순으로 나타났다.

○ 또, 대전은 숙박여행지 보다 당일여행지로 선호하고 있고, 여행형태는 개별여행(92.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여행의 주목적은 여가·위락·휴가의 비중이 5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친지방문(19.4%), 식도락(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별여행객이 대전을 여행하면서 지출한 총비용의 평균금액은 8만원이며, 그중 식음료비(25.3%)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번 연구결과는 대전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접한 충남·북, 세종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표시장으로서 매력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장점과 함께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 또한, 식도락 관광자원의 풍족도가 높아 음식을 하나의 강점으로 적극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스마트관광 도시환경 구축, 대전방문의 해에 대한 이벤트 활용방안, 하드웨어 유형의 즐길 거리 확충 등 관광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 대전시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연구를 통해 얻어진 대전관광 정보를 활용하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매년 축적된 연구결과는 향후 관광객 유치확대와 재방문을 증대를 위한 관광관련 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여행 1천만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관광’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대전시는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042-270-3971) | 게시일 : 2020.03.27.)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확충...240억 투입

- 자연휴양림 보완·치유의 숲·산림레포츠 단지 등 확충

- 충남도가 매년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40억 원을 들여 산림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에 나선다.
- 도에 따르면 2010년 도내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160만명에서 지난해 210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이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 도는 이러한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 자연휴양림을 보완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 또 산림레포츠 시설을 구축하고, 원산도자연휴양림 밑그림(실시설계)을 그리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도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통해 숲속의 집 등 노후시설물 리모델링과 치유 공간 및 편익·휴양·안전시설을 정비한다.
-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천안시 풍세면 태학산, 계룡시 향적산, 공주시 주미산 일원에 힐링수요 증가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산림치유 역할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 특히 2017년부터 추진한 서천군 중천면 치유의 숲은 오는 7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 산림레포츠 시설은 천안시와 홍성군 일원에 24억 원을 투입,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 '보령~태안 해저터널·연륙교' 개통에 따라 새로운 관광거점이 예상되는 원산도 내에는 중부권 최초 해안선을 활용한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을 2022년까지 신규 조성한다.
-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실질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아울러 기존시설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라며 "전국 으뜸의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산림복지과(041-635-4511) | 게시일 : 2020.03.23.)

[전라북도] 국가산림문화자산 새단장으로 산림가치를 높인다

- 생활속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 산림문화자산의 가치 증진
- 전북도 국가산림문화자산 섬진강발원지 데미샘 등 14개소 지정

□ 전북도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14개소에 대해 산림자산을 보전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도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숲, 나무, 표석 등 유·무형의 산림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등 14개소를 발굴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보전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문화자산의 종합안내판 설치,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시행한다.

□ 또한 역사적, 생태적, 경관적, 학술적, 정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자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자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다.

○ 도내 산재되어 방치되고 있으나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자산을 발굴하여 이를 보완·정비하여 보존하고 가치를 증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자 시·군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국가산림문화자산은 토지, 숲, 나무, 자연물, 목재제품, 기록물 등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형의 산림자산과 전설, 전통의식, 민요, 민간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무형의 산림자산을 발굴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산림청에서 지정한다.

○ 우리 생활속 주변의 가치 있는 유·무형의 산림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산림자산의 토지주나 소유주는 2020. 4. 14(화)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께한 삶의 일부분으로 주변의 산림은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이를 잘 보존하고 가치를 증대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도는 숲이 주는 풍요로움을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잘 가꾸고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063-280-4658) | 게시일 : 2020.03.24.)

[전라남도] 전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 올해 농촌관광객 120만 명 유치, 농외소득 150억 달성 목표

- 전라남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올해 농촌 관광객 120만 명, 농외 소득 15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전라남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 유치 홍보, 노후된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 체험객의 만족도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13개 시군, 20개 마을에 4억 6천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 사업은 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마케팅홍보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5개소 ▲팸투어,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홍보비 지원' 2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보수 확충' 13개소 등을 지원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체험마을에 대한 문의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32)와 전남 농촌체험관광 누리집(www.jnfarmtour.com)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은 관광과 레저, 휴식과 치유, 교육과 복지의 공간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생태, 문화, 힐링자원이 풍부해 농촌관광에 있어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어,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의 농촌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전남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64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제공,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해 109만 명이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다녀갔으며, 133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30) | 게시일 : 2020.03.27.)